

# 국회 정개특위, 地選 선거구 획정 논의 착수

‘선거 180일전’ 획정시한 훌쩍 넘겨  
진보개혁 4당 “중·대선거구제 도입”  
조국 “정당만 다른 똑같은 구조 같다”

6·3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19일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을 상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며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선거구 획정에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는 아직 이를 확정하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1월13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법안은 상정하지 못한 채 공전을 이어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미애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실 앞에서 정치 개혁을 촉구하며 피케팅을 하는 진보 4당 의원들 앞을 지나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개혁 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제도의 지체 없는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조국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위험적 선거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기득권 타파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인구 편차에 따른 선거구 위헌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지방선거 지역

구의 인구 비율을 1대3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이러한 위헌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는 “만약 이대로 지방선거를 치

르게 되면 전국 수십 군데의 위헌 선거구가 존치된 상태에서 당선자가 뽑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 획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려 489명이 무투표 당선된 현실을 꼬집으며 “유권자가 투표도 하지 못한 채 당선자가 정해지는, 사실상 의미 없는 선거가 치러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는 대구든, 영호남 모두 독점하는 정당만 다를 뿐 구조는 같다”며 “한 정당이 지방 정부와 의회를 씩씩이하거나 거대 양당이 양분해 공생하는 무경쟁 기득권 구조 속에서 전국 곳곳에서 돈 공천이 자행되고 단체장과 의원들이 감옥에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진보개혁 4당은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정수 30%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3월 내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마침 이날 국회 정개특위에 관련 법안들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조 대표는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표했다.

그는 “정개특위에서 생색내기용으로 한 두 개 법안만 처리될지도 모른다”면서 “정치개혁은 반드시 이번 3월 내에 모두 처리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진수 기자

##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대결

오늘 공소청법 표결후 중수청법 상정  
‘조작기소’ 국조 계획서도 처리 수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를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전행 방해)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날부터 22일까지 3박4일간 상정과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표결 등의 순서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공소청법안이 상정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

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과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됐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이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공소청법은 부칙에서 검사를 제외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수청 등 국가기관으로 인사 발령이 가능하게 했다.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이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수청법이 상정된다. 민주당은 이후 국조 계획서도 처리할 방침이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모두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연합뉴스

## 김병내 “광역위생매립장 우회도로 개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9일 남구 양과동 광주시립수목원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환경 문제 해소를 위해 효천지구 약취 해결과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우회도로 개설을 생활밀착형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공약의 핵심은 광주시립수목원을 찾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와 쾌적한 환경 여건 조성이다.

현재 효천 1·2지구 주민들은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가동으로 인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악취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을 드나드는 대형 쓰레기 운송 차량과 일반 방문객의 차량이 뒤섞임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 위험과 악취, 소음 등 민원 또한 주변 우회 도로 개설로 해결할 방침이다.

김병내 예비후보는 “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위협 받아서는 안된다”며 “우회도로 개설을 통해 쓰레기 차량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시민들께 안전하고 청정한 환경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변은진 기자

## 조계원 ‘소부장 특화단지 포럼’ 개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이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포럼’을 개최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

으며,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료 수급 불확실성 등 외부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 국가산단은 이미 위기가 현실이 된 상황”이라며 “특화단지 지정으로 산업 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역 일자리와 경제를 함께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2026

#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